

## 연구부정행위에서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의 쟁점 사례연구

### Issue Analysis of Plagiarism and Unethical Authorship in Research Misconduct

김 태 황(Kim, Tae Hwa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aise and to presen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issues of specific circumstances in which plagiarism, which accounts for most of the research misconduct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unethical authorship can overlap. The previous discussions encompass the concept of research misconduct, the basis and method of judgment,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But this study attempted to intensify the specific discussion on specific issues. In order to improve the awareness and practices of research ethic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ivate and social benefits of the implementation of research ethics, and to induce a decrease in private profits and an increase in private costs due to viol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 by setting the situation based on real cases. In the case of using the main contents of the preceding work as it is while excluding the co-authors of the preceding work and writing the subsequent work alone, it is reasonable to judge it as an act of plagiarism rather than an unethical authorship. In conclusion, it is judged that plagiarism should be considered first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overlapping between plagiarism and unethical authorship.

Key words: Research Ethics, Research Misconduct, Plagiarism, Unethical Authorship

\*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경제학박사, ecothk@mju.ac.kr

## I. 서론

2011년 「학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되어 제15조에 “연구윤리 확보” 조항이 명시됨에 따른 이행 조치로써 2014년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마련된 이후 연구윤리 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연구윤리 준수를 요구할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2011년 이후 202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학계의 연구윤리 이행 노력은 급속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왔다. 특히 공공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윤리 평가가 정규화되고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는 연구자 개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엄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연구윤리 확립과 준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 규정의 체계화, 심의와 평가의 엄격화, 적용 범위와 방식, 연구윤리 문화의 정착 등 일련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학술적, 실천적 논의를 확대하고 심화했다.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2011년 「학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되기까지가 연구윤리에 대한 각성기였다면, 이후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은 연구윤리 정착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18-19년 해외 부실학회 참석 또는 부실 학술지 게재, 자녀 또는 미성년 공저자의 부당한 저자표시 등의 위반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부각되었고,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시행한 일련의 과정은 역설적으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실천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표출시킨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난 10년 간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과 학술단체는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였으며 특히 대학은 연구 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 왔다.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평가에서 연구윤리 준수와 점검 체계를 평가한 점도 단기간에 연구윤리 규정과 이행 환경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한다. 현재부터 성숙기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개념 설명, 원칙 또는 규정의 소개, 적용 방식과 절차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계몽적이고 교육적인 논의 차원을 넘어 효과적이고 정확한 이행방식을 논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sup>1)</sup>

연구윤리의 학술적 논의를 심화하기 위한 각론적 고찰은 실제 사안별로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과 영향이 중대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비공개적이며 사후적으로 공개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쟁점은 생략되거나 축약되고 결과만 제시됨으로써 학술적 검토와 분석이 어렵다. 한국연구재단의 연례 실태조사(2019, 2020)의 결과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인식과 발생 원인과 대책의 심각성이 잔존하므로 실제 사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논의하고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연구윤리 개념과 주요 대학 및 학회의 규정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의 표준 교안으로 작성된 엄창섭·김태황(2020)을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부터 수행되었다.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유형별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의 위반행위는 배타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 전자는 연구윤리 규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적용 방식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를테면 표절 행위로 고려할 것인지, 부당한 저자표시 행위로 심의할 것인지에 따라 상이한 판단 근거를 검토해야 하고 상이한 결과와 파급영향이 유발된다.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실제 심의과정에서는 실천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의 목적은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부정행위 가운데 빈도가 가장 많은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가 중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쟁점을 제기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 II. 연구부정행위의 논의와 쟁점

### 1. 논의의 흐름과 쟁점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는 표절 행위에 집중되어 왔다. 개념의 구성 요인, 적용 범위, 유발 요인, 심의 방식, 법적 해석 등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오면서 판단의 적합성이 쟁점이 되어왔다.

사회적 인식론과 연구윤리의 연관성을 탐구해 온 Resnik(1996)은 연구윤리 개념의 확장성과 적용의 엄밀성을 선도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에 따르면, 연구윤리는 사회적 인식론이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철학과 연계되는 지점이며, 위반행위는 연구 위축의 내재적 측면과 윤리적 부정직의 대외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포괄시키므로 연구윤리는 사회적 응용 윤리로써 고려되어야 한다. Homer and Minifie(2011)는 연구윤리 준수 특히 과학적 기록의 진실성이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므로 연구의 제안, 이행, 검토, 보고, 교육, 감시 감독 등 전체 연구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esnik(2019)은 연구윤리를 보다 엄밀하게 적용하기 위해 연구부정행위의 적용 범위를 통계 기반, 의미 있는 이해충돌, 검증 공개의 실패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sup> 이에 앞서 Wible(2016)은

2) Shamoo, A. and D. Resnik (2015)는 과학자의 윤리적 행위 원칙으로 정직성, 객관성, 진실성, 주의깊음, 개방성, 지적 재산권 보호, 기밀유지, 책임성 있는 출판, 책임성 있는 멘토링, 동료 존중, 사회적 책임, 무차별, 전문 역량, 준법성, 동물 보호, 인간 주체성 보호 등 16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원칙들은 Resnik이 미국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의 홈페이지에 2015년 12월 올린 글 “What Is Ethics in Research & What Is It Important?”에서 재인용했다.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 또는 재실험(재분석)에 의한 동일한 결과 도출이 실패할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정직한 연구 오류로 간주해야 한다고 논증하였다. 연구의 진실성과 객관성이 실질적으로 보증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Pupovac and Fanelli(2015)는 연구부정 행위자의 동료 연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메타분석한 결과 동료 연구자들이 표절 행위를 인지한다는 비율이 위조나 변조 행위의 경우보다 높으며 표절과 위조 및 변조 행위는 상관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우리나라 공공 정책 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에 대한 연구윤리 평가 과정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절 의심사례로 지적된 건수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였고 한 보고서에서 부당한 중복게재 의심사례는 표절 의심사례와 병행하여 지적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위반행위가 평가 대상 보고서에서 균등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일부 보고서에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sup>3)</sup> 연구자 개인과 연구 저작물에 따라 연구윤리 인식과 이행 정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거나 편중되는 경향은 학술적, 실천적 논의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함을 방증한다.

윤리적 관점에서 ‘고의성’을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근거로 고려할 경우에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곽동철(2007, p.107)은 “인용과 표절을 구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는 사용 정보의 출처 및 저작자 표기에 대한 고의적 누락 여부”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종문(2009)은 표절을 도용 행위, 공정한 관행에 불합치한 인용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로 분류하였다. 계승균(2018)은 표절의 의도성을 강조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표절 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적극적인 도용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해 출처 표기가 누락된 경우에는 고의성과 과실을 어떻게 분별하여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사전적(事前的) 고의성이 과실을 방편으로 삼을 경우 사후적 비(非)고의성으로 전환되어 소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 정보와 자료의 공개와 공유가 가속화되면서 표절 행위의 판단은 특정 타인과 자신의 연구 독자성의 구분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익명의 타인과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중요해졌다. 즉 일반적 지식에 대한 판단 근거가 쟁점이 된다. 이인재(2016)에 따르면, 일반적 지식은 해당 학문 분야에서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이라 하더라도 “논쟁적인 사실이나 자세한 통계 수치, 내용이 변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일반적 지식”이 아니라고 단정했다(p.89). 또한 표절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유사성이 높다면 표절이라고 주장했다(p.93).

연구부정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쟁점은 학제간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명수(2018)는 표절 관련 대법원 판결(2015다5170 판결)이 저작권

3)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5개 정책 연구기관에 대한 2014-19년 연구윤리 평가 과정에서 총 누적 위반건수 가운데 79.4%가 표절 의심사례에 편중되었다. 또한 2018년에 발간한 정책보고서들 가운데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144편의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8편의 보고서에서 21건의 위반 의심사례가 지적되었는데, 위반 건수의 61.9%에 해당되는 13건이 2편의 보고서에 집중되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부자료).

법에도 표절의 용어가 없고 기존 판례에도 확립된 기준이 없는 가운데 의미있는 첫 법적 판단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정진근(2019)은 표절 행위는 법 위반 또는 권리 침해와는 달리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윤리적 의무에 대한 위반행위로써 저작권과 다른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는 법원이 표절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물론 저작권 침해의 기준은 법률 해석의 사안이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가 아닌 윤리적 영역에 속한 표절에 대한 기준을 법원이 제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김병철(2013)은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 심의(평가)의 목적, 기준, 방법, 절차, 결과 활용 등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청재(2019)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준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가운데 중요도는 높으나 실제적인 성취도가 낮은 요인으로 연구 관행과 사회적 합의가 논의되었다. 환언하면 연구자가 익숙한 기존 연구 관행의 부당한 요소들이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위반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심의라 하더라도 연구 분야와 방식 및 내용에 따라 일률적인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윤리적 기반을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리하여 저자는, 연구윤리 준수는 연구자 개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관련 정책이나 행동준칙, 보상과 제재, 조직 및 예산 등 연구 환경적 요인들은 오히려 연구의 수월성을 저해하는 규제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윤리의 적용 범위와 이행 방식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인재(2010)는 보다 엄밀한 동료 평가를 통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연구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ammer(2016)도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조직(기관) 내외부 동료 연구자와의 협업이 효과적이며 여러 연구 모임을 통해 학술적 압력을 활용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에 박정원 외(2011)는 법 제도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에서 연구윤리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에는 표절 예방 운영 지침과 규제 방안 마련, 표절 탐색 시스템 개발과 활용, 제도적 규제와 입법 장치 마련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고, 후자로는 글쓰기 윤리 교육과 실천적 글쓰기를 통한 연구윤리의 강화 조치가 제안되었다. Juyal et al.(2015)는 표절 행위의 원천적인 근절은 구조적으로 어렵더라도 행위를 추적하고 행위자를 고발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동료 평가, 법 제도와 교육의 실천적 효과에 대한 논증이 보강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각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법적 제도적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와 규정에 대한 논의도 심화시켜야 한다(이현복 외, 2010). Resnik et al.(2015)는 세계 연구개발(R&D) 기금 상위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조화롭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sup>

또한 Kuroki(2018)는 진실, 신뢰, 리스크의 관점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새롭게 분류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실의 배반 행위로는 위조와 변조를, 신뢰의 배반 행위로는 문장 표절 행위, 재현 불가능, 부적절한 연구 관행을 분류하고, 리스크에는 건강과 생산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논의들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점과 개념, 적용 범위, 판단 근거와 방식, 실천적인 대응책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쟁점은 위반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 2. 연구부정행위의 추이와 발생 구조

한국연구재단의 전국 4년제 대학교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로 신고되어 판정 대상이 된 건수는 2014-19년 기간 중 현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표 1). 2019년의 경우 판정 대상 건수 243건 가운데 연구부정행위로 최종적으로 판정된 건수는 91건이지만 연구 윤리의 인식과 실천의 측면에서 중대한 실태를 방증한다.<sup>5)</sup>

〈표 1〉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연구부정행위 유형별 의심 판정 건수(2014-19년)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위 조	1	0	4	4	3	8
변 조	5	3	1	2	6	5
표 절	18	23	30	18	33	70
부당한 저자표시	3	3	30	9	41	127
중복게재	1	6	17	13	10	25
제보방해	0	0	0	0	0	0
기 타	3	6	10	12	17	33
합 계	31	41	92	58	110	243(268)*

주: 1) 판정 대상 건수이며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건수는 아님.

2) 연도별 대상 대학교 수의 차이가 있으며, 2018년 176개, 2019년 180개임.

3) 2019년 총 건수는 243건이지만 유형별 건수 합계가 268건인 것은 25건이 유형 중복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박문수 외 (2020), 『2019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연구재단, p.11.

박문수 외 (2019), 『2018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연구재단, p.22.

이러한 판정 건수는 대학교가 제보나 신고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로 접수하여 조사를 시행한 연구 저작물에 국한된 것이므로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절대다수의 저작물

4)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개 국가 가운데 22개 국가가 연구부정행위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부당한 저자 표기와 그릇된 이해충돌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각각 동일하게 36.4%, 부당한 동료검토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31.8%, 연구부정행위 조사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27.3%, 부실한 자료 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27.3%로 나타났다.

5) 2018년까지는 판정 건수로만 조사하였고 2019년부터 판정 대상 건수에 최종 판정 건수(연구부정행위와 부정행위 아님으로 구분)를 추가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까지 고려한다면 연구부정행위 의심 및 최종 판정 건수는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018년부터 건수가 급증한 것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감의 변화에 따라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기에 대한 신고가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연구관행에 익숙해져 온 연구자들의 엄밀한 연구윤리 실천이 미진한 점이 누적되어 온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6개 대학교의 91.0%가 교육부 훈령에 따라 이미 2014년에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였고 68.2%는 교내 전담부서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연구윤리 인식과 실천의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9).

연구부정행위 의심으로 판정 대상이 된 사례 건수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부당한 저자표시의 경우가 전체의 37.0%를 차지함으로써 표절의 경우(30.6%)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는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부당한 저자표시 건수가 127건으로 전체 부정행위 의심 사례 268건의 52.3%를 차지할 정도로 현저한 격차를 나타냈다(표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표절 의심사례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교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적확하게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181명의 51.1%와 28.3%는 각각 부당한 저자표시와 표절이 심각한 현실로 인식하였다. 설문 문항을 조정한 2020년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2,689명의 44.4%는 부당한 저자표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매우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빈도도 1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절 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38.5%가 발생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문수 외, 2020).

연구부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연구자 간 치열한 경쟁과 양적 업적 평가체계에 따른 성과 지상주의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는 실익과 장점이 두 번째의 우선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송충한 외, 2019; 박문수 외, 2020). 환언하면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의 사적 이익을 사적 비용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이러한 사적 이익의 증대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법 제도와 조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제재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부정행위의 동인은 반복 재생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사적 이익은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획득할 수 있는 속성을 나타내는 반면에 사적 비용은 사후적인 잠재 비용이다. 이 비용은 상황에 따라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적인 기대비용은 낮게 인지될 수 있는 속성이 있다. 연구윤리 준수의 사적 이익과 비용도 마찬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구윤리 규정 인지와 준수의 번거로운 비용은 연구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반면에 준수의 사적 이익은 사후적으로 간접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결국 연구자 개인에게는 연구윤리 준수의 동인보다는 연구부정행위의 동인이 현실적으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다음의 간단한 산식에서, 먼저 연구자가  $A_1$ 를  $B_1$ 보다 크게 인식한다면 연구윤리 확립의 실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B_1$ 를  $A_1$ 보

다 크게 인식한다면 연구부정행위의 동인이 확대될 것이다(1)식). 그러나 (2)식에서 사회적 이익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부등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A는 연구윤리 준수의 경우, B는 연구부정행위의 경우를 나타내며,  $S_i$ 와  $S_c$ 는 각각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지칭한다. 사회적 이익( $S_i$ )은 개인이 인식해야 할 항목이고, 사회적 비용( $S_c$ )은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지출 항목이다. 연구자 개인이 사회적 이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A가 B보다 커지는 상황을 유지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

$$A_1(\text{사적 이익}-\text{사적 비용}) \geq B_1(\text{사적 이익}-\text{사적 비용}) \quad (1)$$

$$A_2(\text{사적 이익}-\text{사적 비용}+S_i) \geq B_2(\text{사적 이익}-\text{사적 비용}-S_c) \quad (2)$$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의 법적 체계만으로는 사적 이익을 감소시키고 사적 비용의 실제적인 증대를 실효적으로 통제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연구자 개인이 윤리적 인식과 실천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 조직이 사회적 이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근거를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Ⅲ.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의 쟁점과 분석

본 장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가 중첩될 수 있는 사안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논의와 분석의 대상은 2019년 A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에서 심의되었던 실제 사례이다. 사안의 본질적 구성요소들을 유지하였으나 해당 실제 사례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임의로 허구의 상황을 구현하였다.

#### 1. 상황 설정

B교수는 4년 전 동료 교수와 연구자 C, D, E와 함께 공동연구를 기획하면서 연구 계획서를 충실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B교수가 연구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고, 네 사람이 논의한 내용을 C교수가 실무적으로 정리하여 계획서로 작성하였다. 연구진은 학교의 연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본 계획서를 공식적으로 학교에 제출하였지만 인쇄본을 남긴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인 공개 문서로 공유하였다. 공유한 연구 계획서에는 저자가 표기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연구가 실행되지는 못하였고 연구 계획서는 사장된 상태였다. 3년이 지난 후 B교수는 해당 연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여 전문 학술지에 단독 저자로 투고하였으며 게재가 확정된 후 C교수에게 게재 확정 사실을 알렸다. 당시 C교수는 B교



수의 단독 저자 사실과 논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난 후 어떤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B교수와 C교수는 갈등과 마찰을 일으켰고 동료관계가 훼손되면서 C교수는 B교수의 단독 저자 논문 게재가 표절 행위라고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소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에서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본조사에서는 5명의 조사위원들이 B교수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표절 행위로 적시해야 할 것인지, 부당한 저자표시로 적시해야 할 것인지 또는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했다. 결국 심층 논의를 거친 후 표절 행위와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 다수결로 최종 판정을 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판정 결과를 보고했다.<sup>6)</sup>

## 2. 문제제기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는 엄연히 다른 유형의 연구부정행위이다. 전자는 타인의 연구 성과를 도용하거나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연구 성과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한편으로는 타인의 연구 성과를 침해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과장함으로써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다. 후자는 저자 자격을 부당하게 누리거나 상실하게 됨으로써 타인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기보다는 자신이 손익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물론 저자에서 누락된 타인은 직접적인 침해를 받는다. 표절 행위자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전제로나 적어도 부분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저자가 누락된 부당한 저자표시의 경우에는 연구 성과가 정당하게 배분되지 않음으로써 표기된 저자의 연구 성과만 과장되게 인정된다.

상술한 상황 설정에서 B교수의 행위가 표절이라면 게재 논문의 학술적 부가가치는 평가될 수 없다. 동일한 내용이라면 재활용도 불가능하다. 부당한 저자표시로 판단한다면 저자로 표시되어야 할 C, D, E교수의 저작권이 침해를 받았지만 B교수는 자신의 기여도만큼의 연구 성과를 주장할 수는 있다. 만일 자신의 연구 기여도를 명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다면 이 부분만을 발췌하여 재활용도 가능하다.

곽동철(2007)은 표절 유형 11가지 중 다섯 번째 유형으로 부당한 저자표시를 포함시키고 있다. 즉 공저자를 모두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표절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위반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사(심의)위원도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의 판단 근거와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가 모두 위반 정도에 따라 심각한 윤리적 실체적 책임을 부과하지만 실제 심의와 판정 과정에서는 혼동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사안에서 B교수는 3년 전 공동 연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그대로 자신의 논문에 도용했으므로 표절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비록 본인이 당시 연구진의 책임

6) 게재 학술지의 발간 학회에서도 본 사안을 심의하였으나, A대학교의 심의 과정은 학회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본 논의에서는 학회의 심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역할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와 저작물에 대해서는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에 당초 연구 계획서는 연구진의 공동 성과물인데 3년의 시차를 두고 B교수가 C, D, E교수를 저자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으므로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구윤리 지침과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판단해야 하는가? 고려해야 사항은 무엇인가?

### 3. 쟁점 분석

본 사안의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부의 지침과 주요 대학교와 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 가지 분석 항목을 구성한다.<sup>7)</sup> 첫째는 연구 성과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 여부와 기여 정도이다. 둘째는 연구의 독자성과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중심으로 한 관계성이다. 셋째는 연구 저작물의 작성 과정과 방식이다.

#### (1) 표절 주장

본 사안을 표절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술한 분석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해당 게재 논문의 주요 내용은 B교수의 성과물이 아니다. B교수가 연구진의 책임자로서 기여한 바와 주도적 역할은 인정되지만 배타적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 설령 연구진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연구 계획서와 게재 논문의 저자가 다르다는 점은 실체적 진실이다. 비공식적인 연구 계획서라 하더라도 연구 아이디어와 기획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부 지침에 명시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제12조 1항 3)에 해당된다. 또한 연구 계획서의 연구진에 당사자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네 사람으로 구성된 연구진과 당사자 한 사람은 동일 저자일 수가 없으며 별개의 저자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게재 논문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 정도는 일부분이며 나머지는 저자가 다른 타인의 창작물로부터 출처표시 없이 도용한 것이므로 표절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결(2015다5170 판결)에서도 판결요지에 [1]항에 “공저가 편집 저작물이나 결합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로 B교수는 C, D, E교수와 관계에서 일방적이고 은닉적으로 논문을 작성했고 게재 확정 사실을 사후적으로 통보했다. C교수가 제소한 본질은 본인이 공동 저자에서 부당하게 누락된 점이 아니라 B교수가 공동 연구 계획서의 독자성을 훼손하면서 게재 논문을

7)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외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의 연구진실성 위원회 규정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속 국책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윤리 평가 규정을 참조하였다.

자신의 독자적인 연구 성과로 표명했기 때문이다. 만일 C, D, E교수가 연구 계획서의 저작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B교수가 논문에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저작권과는 무관하게 연구윤리 지침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7조 4항에 따르면 정확한 출처표시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연구 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려대 연구윤리 규정 제25조에도 출처가 집중될 경우에는 독자가 연구자와 타인의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로 연구 계획서가 출처 표기 대상의 저작물로 인정이 되고, 연구진이 모두 게재 논문의 저자가 되었다면 부당한 저자표시의 문제는 없지만 자기표절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논문 작성 과정에 초점을 두면 표절로 판단해야 한다. 게재 논문이 연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재구성했다 하더라도 저작물 기준으로는 별개이다.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논문 작성에는 C, D, E교수가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C, D, E교수의 저자 자격(authorship)은 연구 계획서에 귀속된다. 만일 연구 계획서의 내용이 재구성되거나 발전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C, D, E교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논문에도 저자 자격을 주장할 수 있고 부당한 저자표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 D, E교수는 논문 작성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참여할 의사 표명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논문 작성 과정에 국한시키면 C, D, E교수가 연구 계획서에 기여한 바와 다른 부가적인 기여도가 없으므로 저자 권한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 (2) 부당한 저자표시 주장

본 사안에 대해 부당한 저자표시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일한 분석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논문의 학술적 가치가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요소라면 게재 논문의 중심 내용은 네 사람 연구진의 아이디어와 창작물이기 때문에 C, D, E교수가 저자로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진을 주도한 B교수가 자신의 기여 부분과 기여 정도를 확대하고 과장하여 활용함으로써 단독 저자가 된 것은 B, C, D의 저자 자격을 부당하게 차단한 것이다. 교육부 지침 제12조 1항 4에도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연구 계획서의 내용과 게재 논문의 내용이 대부분 중복된다면 시차가 있더라도 연구 계획서의 저자와 논문의 저자가 동일해야 한다.

둘째로 연구 계획서와 게재 논문은 자기 관계성을 가진다. 즉 연구진 외부의 타인과는 무관한 내부 상호관계의 문제이다. 연구진이 게재 논문의 공동 저자가 될 수 있었으나 C, D, E교수는 연구 계획서를 활용한 논문 작성에 관심이 없었거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B교수가 연구진의 공동 연구 관계를 파기한 것이므로 저작권 또는 저작권한의 위반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 물론 연구진이 모두 게재 논문의 저자가 되었다면 자기표절 행위로 판정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사안이다. 본 사안의 핵심은 공동 연구진의 관계에서 창출된 학술적 성과물의 저작권이 한 연구자에 게만 귀속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판단하는 것이다.

셋째로 C, D, E교수가 저자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형식 논리로 살펴보면 게재 논문은 전적으로 B교수에 의해 작성되었다. C, D, E교수는 연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논문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부당한 저자표시가 유발된 것이다. 연구 계획서는 저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공식적인 저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제출된 공개 자료이므로 저자 자격은 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계획서의 저자 자격이 논문의 저자 자격으로 연계되지 못한 위반 사례이다.

#### 4. 분석 결과

상이한 두 가지 관점과 주장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표절 사례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먼저 양측 주장 모두 게재 논문이 연구 계획서의 독자성을 침범할 정도로 의존성이 높은 위반 행위라는 점에는 공통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학술적 부가가치가 결여되었다는 점은 저자 자격 부여의 문제 이전에 연구 성과물의 본질적인 수준을 평가한 결과로써 표절의 핵심 구성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행위자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점은 은닉적인 사적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행위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연구진이 논문에서 저자 자격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표절로 판정받을 수 있다면 표절이 본질적인 사안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는 관련된 내부자들의 공감대 또는 합의와는 무관하게 타인에게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따라서 본 사안은 연구진 내부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성에서 판단해야 한다. B교수는 논문을 작성하면서 선행 저작물의 주요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무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교육부 지침 제12조 1항 3).

만일 본 사안처럼 선행 저작물을 출처표기 없이 활용하는 경우를 부당한 저자표시로 판단한다면 모든 표절 행위는 부당한 저자표시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저작물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비록 저자가 될 기회와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저자 자격에 필요한 기여도가 발휘되지 못했다면 저자 자격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 사안에서 선행 연구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부여된 저자 자격이 후속 논문 작성 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 발휘되지 않았다면 저자 자격의 쟁점보다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쟁점으로 고찰해야 한다.

#### IV. 결론

2005년 이후 연구윤리 인식의 각성기와 2011년 이후 정착기를 거치면서 성숙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기반, 지침과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 적용 사례의 환류적 파급 효과, 보편적 연구윤리 문화의 확산 등에 관한 논의가 확장되고 심화되어야 한다. 연구자 개인으로서의 객관적인 연구윤리 규정과 주관적으로 익숙한 연구 관행과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먼저 인식하고 학습, 점검, 교정의 과정을 이행해야 한다. 대학교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부정행위가 연도별, 유형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연구윤리 규정과 전담 행정 조직이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인식과 준수 노력이 미진함을 방증한다. 사전적인 연구윤리 교육과 사후적인 제보, 심의, 제재(징계)의 제도적 장치 운영을 병행하여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유형별로 중첩될 소지가 있을 경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의식에서 시행되었다. 선행 논의들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점과 개념, 판단 근거와 방식, 적용 범위, 발전적인 이행 방안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구체적 쟁점 사안에 대한 각론적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했다. 총론적으로 한편으로는 연구윤리 준수를 통한 (사적 이익+사회적 이익)의 증대와 사적 비용의 감소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반행위에 의한 사적 이익의 감소와 (사적 비용+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유발시킴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윤리 인식과 실천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가 중첩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표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타인 또는 자신의 선행 연구의 독자성을 침해할 정도로 후속 연구의 학술적 부가가치가 결여되었다면 저자 자격 부여의 문제 이전에 연구 성과물의 본질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 기반한 상황 설정으로 쟁점 사안을 분석한 결과 선행 저작물의 공동 저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후속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선행 저작물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활용한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시보다는 표절 행위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표절의 쟁점을 배제하고 부당한 저자표시에 초점을 두고 판단할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시가 해소될 경우에도 표절의 쟁점으로 회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표절 행위에 대해 부당한 저자표시를 적용해야 하는 맹점에 직면할 수도 있다.

## 참고문헌

- 강명수(2018), 논문 작성에 있어 자기 또는 타인 저작물 인용의 적법 요건-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018년 봄호, 5-2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8), 『국책 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규정 및 사례』.
- 계승균(2018), 표절과 유사 개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과 연계하여-, 『법학연구』, 59(3), 383-409.
-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2018. 10. 1 일부 개정
- \_\_\_\_\_,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2017. 1. 1. 제정
- 곽동철(2007), 학술논문에서 표절의 유형과 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3), 103-126.
- 교육부(201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18. 7. 17 개정
- 교육부·한국연구재단(2019), “2019년 연구윤리 활동 지원 사업 세부 시행계획”, 2019. 4.
- 권청재(20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영향요인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박사 학위 논문.
- 김병철(2013),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실태 및 개선방향, 『정책개발연구』, 13(2), 111-141.
- 박문수·김재현·백승민·홍정의·김해도(2020), 2020년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수준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Issue Report, 2020\_9호.
- 박문수·이성호·김해도·백승민·홍정의(2020), 『2019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연구재단.
- 박문수·서인석·김해도·백승민·홍정의(2019), 『2018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연구재단.
- 박정원·이성흙·최상봉(2011), 연구윤리 확립을 통한 표절예방 및 저작권 보호, 『교육법학연구』, 23(2), 27-50.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서울대학교 학교 규정 제1980호, 2014. 12. 9. 전부 개정.
- \_\_\_\_\_,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2010. 7. 16 개정.
- 송충한·신정범·백승민·김해도(2019),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Issue Report 2019\_11호.
- 엄창섭·김태황(2020), 『교수 대상 연구진실성 표준교안』,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019. 9. 26. 개정.
- 이인재(2010), 연구진실성과 연구윤리, 『윤리교육연구』, 21, 269-290.
- \_\_\_\_\_(2016),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의 이해-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나타난 표절을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22(2), 85-97.
- 이종문(2009), 학술논문 표절 원인 및 주요 쟁점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2(2), 1-24.
- 이현복·이찬미(2010), 연구윤리에 대한 국내외 규정과 제도 비교, 『윤리연구』, 77, 257-280.
- 정진근(2019),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에 대한 평석-, 『경영법률』, 29(2), 539-577.

- 홍성주 외(2018), 『연구진실성 제고를 위한 사례조사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Hammer, M. J.(2016), Academic Pressure and Research Ethics at the Crossroads, *Research Ethics*, 43(1), pp.30-31. DOI: 10.1188/16.ONF.30-31
- Homer, J. and F. D. Minifie(2011), Research Ethics III: Publication Practices and Authorship, Conflicts of Interest, and Research Misconduc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4, S346-S362.
- Juyal, D., V. Thawani and S. Thaledi(2015), Plagiarism: An Egregious Form of Misconduct, *North American Journal of Medical Sciences*, 7(2), 77-80.
- Kuroki, T.(2018), New Classification of Research Misconduct from the Viewpoint of Truth, Trust, and Risk, *Accountability in Research*, 25, 404-408.
- Pupovac, V. and D. Fanelli(2015), Scientists Admitting to Plagiarism: A Meta-analysis of Surveys, *Sci Eng Ethics*, 21, 1331-1352. DOI 10.1007/s11948-014-9600-6
- Resnik, D. B.(1996), Social Epistemology and the Ethics of Research,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27(4), 565-586.
- \_\_\_\_\_ (2015), What Is Ethics in Research & What Is It Important?, <https://www.niehs.nih.gov/research/resources/bioethics/whatis/index.cfm>
- \_\_\_\_\_ (2019), Is It Time to Revise the Definition of Research Misconduct?, *Accountability in Research*, 26(2), 123-137.
- Resnik, D. B., L. M. Rasmussen and G. E. Kissling (2015), An International Study of Research Misconduct Policies, *Accountability in Research*, 22, 249-266. DOI: 10.1080/08989621.2014.958218
- Shamoo, A. and D. B. Resnik (2015),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3<sup>rd</sup>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ble, J. R. (2016), Scientific Misconduct and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in Science and Economics”, *Review of Social Economy*, 74(1), 7-3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에 관한 내부자료

투고일자 : 2020. 09. 12

수정일자 : 2020. 09. 16

게재일자 : 2020. 09. 30

<국문초록>

## 연구부정행위에서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의 쟁점 사례연구

김 태 황

본 연구의 목적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연구부정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가 중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쟁점을 제기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선행 논의들은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판단 근거와 방식, 적용 범위, 개선 방안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구체적 쟁점 사안에 대한 각론적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했다. 연구윤리 인식과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윤리 이행에 따른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위반행위에 의한 사적 이익의 감소와 사적 비용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사례에 기반한 상황 설정으로 쟁점 사안을 분석했다. 선행 저작물의 공동 저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후속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선행 저작물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활용한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시보다는 표절 행위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가 중첩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표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주제어: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